

한국 소방공무원의 부패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채열식
충청소방학교

Study on Reduction of corruption of the Fire officials in Korea

Chae, Yeol Sik
CFSA

요 약

오늘날 부정부패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세계 각 국가들은 부정부패척결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추방에는 여야의 구분도 계층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 지속적인 부패척결과 노력과 더불어 부패현황과 반부패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소방부패 근절과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식변화까지 도모해야 진정한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21세기 청렴라운드시기에 조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부정부패수준에 대한 국내외 우려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부패의 발생도 지위고하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국회의원은 물론 장·차관과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들이 부패행위에 연루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부정부패의 특징은 총체화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오랜 관습에 얽매어 관행화되어 있으며 일상화가 되어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의 소방공무원은 행정기능의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광범위한 행정상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국민들의 다양한 소방행정수요의 증가와 욕구의 증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방서비스 증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비리와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정부의 반부패 노력의지를 퇴색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적절성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방부패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방부패 근절 및 저감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소방부패의 이론적 논의 및 고찰

1. 소방부패의 개념 및 정의

현재 국내 소방부패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부패개념과 공직부패 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 해서 소방부패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패의 개념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에 있음을 기회로 영향력을 직접, 간접으로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 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 규범적 의무를 이탈한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윤광재(2003: 6)는 부패를 포괄하는 개념의 범위에 따라 부패를 정의하려는 관점에 의하면 사회적 공감대 차원의 부패는 ‘가장 넓은 의미의 부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또한 권위를 오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공직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적인 거래관계, 직업과 관련된 사기 및 사회적 일탈행위 전반이 부패개념에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 밖에도 ‘넓은 의미의 부패’, ‘좁은 의미의 부패’, ‘가장 좁은 의미의 부패’로 구분될 수 있으며 공직부패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좁은 의미의 부패’, 즉 ‘공직자가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논의를 기초로 하여 소방부패를 “소방공무원이 개인 혹은 조직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의무에 반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소방부패의 유형

우리나라 부패의 유형은 분류하는 기준과 학자들에 따라 정치적 부패, 관료적 부패, 기업 부패, 언론 부패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는 크게 정치적 윤리적 부패, 관료부패, 공직부패, 직무상부패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광의의 부패인 관료부패는 최광의 부패에서 공직자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직자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불법 부당행위를 의미하며, 공직자로서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경기개발연구원, 2002: 16-19). 그리고 부패행위에 있어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로서는 정실형 부패, 위협형 부패, 사기형 부패, 거래형 부패로 구분하고 있다(김상균, 2006: 79). 정실형은 후진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으로 혈연, 지연, 학연 등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일반인들에 우선하여 유리한 조치나 결정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협형은 갈취형 또는 공갈형이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치나 결정을 예방한다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부패유형을 말한다. 사기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기나 횡령을 행하는 유형이다. 거래형은 가장 전형적인 부패유형으로 어떤 조치나 묵인으로 대가를 받는 유형이다(김상균, 2006: 79).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방부패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즉, 소방부패의 유형은 관료부패와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소방부패의 유발요인

공무원들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시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며, 그에 따른 다양한 유발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공무원들의 독점적 권한은 일정 부분 필연적인 현상이다. 공무원들은 그 기능상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의 배분과 구입, 그리고 각종 규제 및 인·허가 업무에 있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독점적 권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무원의 독점적 권한이 강할수록 그만큼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부패를 다음과 같이 개인적 요인, 조직 내부적 요인, 사회 구조적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은 주로 공무원의 도덕성과 책임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만족할 줄 모르는 개인의 탐욕에서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직 내부적 요인은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인간이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기가 어려운 이상 무엇보다 속해 있는 집단 내부의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은 공무원의 생각과 가치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전반의 도덕적 분위기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구조적인 요인들이 부패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행정학회(1999: 6-21; 경기개발연구원, 2002: 25)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부패는 근대화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작용과 우리만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권력의 정당성 결여, 권력의 집중, 정치문화의 후진성, 정부 주도적 경제개발의 급속한 추구, 관치금융, 경제활동의 낮은 투명성, 사회가치의 전도 등 급속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각종 파행과 부조리, 그리고 연고주의, 온정주의, 의리의식, 답례문화, 경조사문화 등의 전통적 가치관이 혼합되어 우리나라 공무원부패의 발생 및 유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부패원인 중 하나는 지방공무원의 가치관 결여와 상·하 복종관계, 그리고 공직의 사유화 등에서 비롯된다. 다른 하나는 연고주의·혈연주의·학연주의가 지방공무원의 부패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공직부패를 조장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부패의 유발요인에 대한 상기의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소방부패의 유발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둘째는 제도적인 요인이 있다. 셋째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III. 소방부패의 실태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의 부패 문제를 연구하며, 국가별 부패수준에 대한 비교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다른 국가를 포함한 비교평가에서도 중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2007년에 실시한 부패지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는 180개 조사대상 국가들 중 43위를 차지하여 OECD회원국 가운데는 사실상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거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1. 한국의 연도별 TI 부패인식지수(CPI)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점수	4.29	5.02	4.29	4.2	3.8	4.0	4.2	4.5	4.3	4.5	5.0	5.1	5.1
순위	27/41	27/54	34/52	43/85	50/99	48/90	42/91	40/102	50/133	47/146	40/159	42/163	43/180
백분율	65.9	50.0	65.4	50.6	50.5	53.3	46.1	39.2	37.6	32.2	25.2	25.8	23.9
OECD	20/25	21/27	26/28	27/30	27/30	27/30	24/30	24/30	24/30	24/30	22/30	23/30	25/30

자료: 청렴백서 (2007), 국민권익위원회, p501에서 인용.

그리고 2008년도 부패인식지수는 5.6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0.5점 개선되었고 국가별 순위에서도 3단계 상승한 40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OECD의 평균점수인 7.11점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진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08년 9월 25일 A10면).

2. 소방부패의 실태

한편 소방공무원 부패인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160.4명의 징계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07년도 78.0%, 2008년도 84.0%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소방공무원 징계 연도별 현황

년 도	평균	'04	'05	'06	'07	'08
징계자수	160.4	134	134	98	176	260
전년대비(%)		3.0	0	△26.9	78.0	84.0

자료: 2009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09), 소방방재청, p138에서 인용.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징계자 802명중 파면 2명, 해임 15명, 정직 165명, 감봉 184명, 견책 436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별 현황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4	134	1	2	22	26	83
2005	134	0	5	22	29	78
2006	98	0	2	18	16	62
2007	176	0	3	35	42	96
2008	260	1	3	68	71	117
합계	802	2	15	165	184	436

자료: 2009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09), 소방방재청, p138에서 인용

또한 징계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직무태만 31명, 품위손상 516명, 금품수수 60명, 직장 이탈 12명, 감독책임 5명, 기타 178명으로 상당부분 부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소방공무원 징계 비위유형별 현황

구분	계	직무태만	품위손상	금품수수	직장이탈	감독책임	기타
2004	134	14	85	11	2	1	21
2005	134	3	78	17	8	2	26
2006	98	7	71	3		1	16
2007	176	1	118	11			46
2008	260	6	164	18	2	1	69
합계	802	31	516	60	12	5	178

자료: 2009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09), 소방방재청. p138에서 인용

그리고 2008년도 계급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사 61명, 소방교 69명, 소방장 81명, 소방위 23명, 소방경 21명, 소방령 5명으로 하위직 계급에서 211명으로 81.2%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접 국민들과 대면하는 담당부서 소방공무원들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2008년도 소방공무원 징계 계급별 현황

구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합계	260		5	21	23	81	69	61
비율(%)	100		1.9	8.1	8.8	31.2	26.5	23.5

자료: 2009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09), 소방방재청, p141에서 인용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 부패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업무가 국민과 접촉이 많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부패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어서 최근 소방부패의 주요사례를 요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첫째 소방부패 유발 요인에는 조직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2008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 소방본부장 이모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현직에 있는 김모 소방서장이 구속되었다. 김모서장은 부하직원 7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하였고, 일부를 본인 징계해제 조건으로 이모 소방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 소방본부장은 부하직원 6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내부자료). 이처럼 소방조직 내부의 뇌물상납 고리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방부패는 다양한 제도 내에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거나 권력중심부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화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제도적인 요인이 있다. 소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수단으로 명령과 강제가 있다. 즉 소방법상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올바른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소방행정상의 조치를 말한다. 행정수단에 의한 법·제도적인 측

면으로는 건축동의 및 완공, 안전시설 설치, 위험물 인·허가, 그리고 소방검사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 (주)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에서 소방안전시설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정모씨 등 4명은 뇌물수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됐다. 2004년 9월 20일 경기도 광주, 용인, 하남, 서울 강남에서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내주면서 돈을 받은 소방공무원과 돈을 준 소방시설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26명이 불구속되었으며, 이중 소방공무원은 모두 7명으로 파악되었다. 즉, 오랜 기간 소방감리원과 소방공무원 사이에 뇌물수수 관행이 계속돼 왔다고 볼 수 있다(내부자료). 셋째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공무원부패 관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부정부패의 쟁점화가 정치권의 국면전환용 정도로 여겨지고 또 부패자체는 의당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간주됨으로써 부패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대단히 높아 부정부패가 문화화 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부패는 구조적이고 관례화 되어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부패는 사회구조 내지는 행정제도 자체가 그 틀 속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부패를 유발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부패도 외부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관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의 양상이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사회에서 부패는 개인의 탐욕과 가치의 문제라고 보는 인식이 뚜렷하다.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부패는 개개인의 성격보다는 각 개인이 맡고 있는 보직이나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의 개인과 기업들도 일이 잘 처리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방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소방부패의 문제점

소방부패의 가장 큰 문제는 대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소방부패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회 안전망 결여이다. 소방은 국민과 아주 밀접한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부패가 곧 국민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건축,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검사를 하고 있기에 더더욱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처럼 중요하고도 중대한 분야에 부패 고리가 연관되어 있다면 국민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부패가 엄청난 큰 피해를 주었다.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 (주)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부실 뒤에 비리와 부패가 있었던 것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시스템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위기 발생이 우려된다. 상기에서 논하여 듯이 부패가 많을수록 재난의 발생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건축물에 안전성이 결여되어 지진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쉽게 붕괴되거나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유는 재난은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건축물은 안전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사시 작동되어야 할 시설이나 기기들이 부패로 인해 전혀 작동되지 않을 때, 건물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며 결국은 재난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IV. 소방부패 저감방안

1. 소방 행정윤리 및 교육훈련 강화

국민 소득수준 개선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윤리 인프라 개선이 절실하다. 단순 부패척결을 위주로 하는 기존 부패라운드에서 보다 적극적 의미의 윤리와 청렴라운드 시대에 조응하는 국가 전반적인 반부패·청렴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청렴백서, 2007: 504-505)고 하겠다.

부패근절을 위한 의식 개선 및 윤리교육 강화는 반부패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충분조건인 것이다. 부패의 근절은 부패의 해악과 반부패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전체의 인식 없이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목표이다. 즉, 공직부패가 공무원들이 부패행위의 주체이나 공무원들의 부패를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민간부문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02: 208).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소방부패 근절을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2. 소방 반부패 홍보 강화

반부패 홍보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국민에 대한 반부패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다. 또한 홍보는 합리적인 정책결정 기능이 있다. 그리고 홍보의 중요성은 “홍보가 일의 절반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점점 정보화가 진전되고 발전할수록 홍보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부의 어떤 정책도 정책대상이나 국민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스컴 즉 신문과 방송으로 구성되는 언론이 부패에 있어서의 주요기능으로는 정보 제공기능, 부패의 문제를 지적·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언론매체이다. 또한 언론의 반부패에 대한 지원역할은 국민의 반부패 의식제고 방안을 강조함으로써 반부패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통제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대국민을 위한 반부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송 채널을 편성하여 반부패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3. 고발 및 감시 시스템 기능강화

공무원부패의 척결은 사후 통제보다는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즉 부패가 이미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부패의 유발요인을 처음부터 발본하고 차단하여 부패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부패의 근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다. 즉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부패근절을 위한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때 부패근절의 가능성이 확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부패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이들 제3섹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부패에 대한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과 연계한 고발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발 및 감시 시스템에 따른 조직내부 통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신고제는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으로 국가 생존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신고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부패통제 기능을 할 수 있다.

4. 불합리한 소방행정 규제철폐 및 제도개선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는 공무원부패 발생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패의 사전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의 개선과 개혁이라 하겠다. 비현실적인 규제, 불명확한 집행기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제도적 요인들은 부패발생의 비옥한 토양으로 기능하며 사정활동의 효과성을 반감하고 부패의 재발과 재연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불분명한 규정을 정비하고 집행기준을 명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전개하여 부패발생의 토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경기개발연구원, 2002: 208).

한편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부정부패에 관련된 제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부패소지를 극소화 하여야 한다.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뒤바꾸는 종합적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안전성을 구현하여 사회 전범위에 걸쳐 반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 시민단체의 협조, 국민들의 협조를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향후 국민 참여에 의한 부정부패 통제제도 구축과 민간기업의 부정부패 유발방지대책 수립,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도 요망된다. 또한 정치권의 협력과 의지, 그리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지지 동원으로 제도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규제를 혁파하여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공정한 기준, 행정의 합리적 법집행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V. 결 론

오늘날 부정부패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세계 각 국가들은 부정부패척결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추방에는 여야의 구분도 계층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

한편, 2007년 GCB조사 결과 주목할 점은 향후 3년간의 부패문제 개선전망에서 응답자의 45%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답하여 정부에서는 지속적·장기적·종합적인 반부패프로그램 추진과 보다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부문의 청렴성 향상전략의 수립·운영이 요청된다(청렴백서, 2007: 507)고 하겠다. 또한 공무원부패는 단기간에

그리고 한꺼번에 척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부패척결과 노력과 더불어 부패현황과 반부패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완전한 소방부패 근절과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식변화까지 도모해야 진정한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21세기 청렴라운드시기에 조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경기개발연구원 (2002). 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002-27.
2. 김상균 (2006). “경찰공무원의 부패실태와 통제방안” 한국부패학회.
3. 윤광재 (2003).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4. 2007년도 청렴백서 (2007). 국민권익위원회.
5. 2009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09). 소방방재청.
6. 동아일보. 2008년 9월 25일 A10면.